

제184호 (2008. 12. 8)

■ 속보/위기의 건설업

- 경제 위기 대응책의 글로벌 동향 고찰

■ 경제 동향

- 2007년 건설업계 현금흐름 악화가 2008년 유동성 경색 유발

■ 정책·경영

-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다시 고려해야”

■ 정보 마당

- 자산 가격 버블의 발생과 측정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긴급 수혈은 건설업부터 시작해야”

경제 위기 대응책의 글로벌 동향 고찰

-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중국 등의 경제활성화대책 유형별 분석 -

■ 많은 국가들이 경기활성화대책의 필요성에 직면

- 금융 시스템 안정화 조치로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많은 국가들이 경기 침체에 맞서기 위해 경기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활성화정책을 구분하면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재정 투자

-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내수 진작 및 고용 증진 등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자의 주요 대상으로 그린 에너지 활성화 대책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언급함.
 - 500억 달러가 소요될 그린 에너지 활성화 대책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 등 재생 에너지 개발과 자동차 연비 기준의 연간 4% 상향, 하이브리드 차량용 전지 개발 등 화석 에너지 효율 제고 사업을 포함함.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관련, 향후 10년 간 600억 달러의 재원으로 교량, 고속 도로 등 노후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개보수 또는 재건축을 담당할 사회간접자본 재투자은행(National Infrastructure Reinvestment Bank; NIRB)의 설립 제안

■ 특정 산업 및 부문 지원 정책

- 미국과 프랑스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자동차산업에 대한, 250억 달러의 구제금융 제공
 - 프랑스는 자동차산업의 전기자동차 개발에 대한 금융 지원
 - 독일은 신규 자동차 구매에 대한 면세 조치를 통해 자동차산업을 지원
- 중국은 도시 지역으로의 노동력 유입을 막기 위해 농촌 지역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음.

■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 정책

- 프랑스와 독일은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금 면제 등 세제 지원 시행
 - 프랑스의 경우, 기업의 투자 활동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면제하고, 프랑스 인구의 3/4 정도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가 예금 한도를 제한하는 대신, 비교적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저축예금(Livret A) 구좌로 예치된 저축을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활용

■ 가계에 대한 정부 보조금

-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2009년 1/4분기에 시행될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 혹은 세금 인하를 계획하고 있음.
 - 오바마 당선자와 독일은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개보수 작업에 보조금 지급 예정
- 일본은 GDP의 1.2%에 해당하는 5조 엔의 재정 자금을 가구당 60,000엔씩 배분하여 지급

■ 부가가치세 인하

- 영국은 소비 활성화, 특히 다가온 크리스마스 특수를 살리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17.5%에서 15%로 인하
 - 부가가치세 인하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제고할 수도 있으나, 영국이 시행한 것처럼 한시적인 인하는 디플레이션 공포를 조장하지 않고 소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프랑스와 독일은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박이 줄어 부가세 인하를 통한 가격 인하가 소비 증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채택하고 있지 않음.

빈재익(연구위원: jjpins@cerik.re.kr)

2007년 건설업계 현금흐름 악화가 2008년 유동성 경색 유발

– 미분양 아파트자재난 등이 주요인, 내년에는 유동성 확보에 주력해야–

- 2004~2007년 일반건설업체의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투자 활동으로 인한 마이너스 현금흐름이 증가하여 현금흐름이 전년 대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7년 총 현금흐름(현금의 증감액)은 마이너스를 1.1억원을 기록함.
 - 2006년 투자 활동으로 인한 마이너스 현금흐름액은 전년 대비 83.2% 증가한 22.3억원을 기록, 총 현금흐름이 전년 대비 11.5억원이 감소한 3.2억원을 기록함.
 - 2007년 총 현금흐름은 전년대비 2.1억원이 감소한 -1.1억원을 기록함.
- 2007년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주원인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전년 대비 70.0%나 감소했기 때문임.
 - 2007년 투자 동으로 인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22.3억원임.
 - 그러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플러스 현금 흐름이 전년 대비 70.0%나 감소한 5.2억원을 기록, 투자활동으로 유출된 금액을 일정 부분 회수하지 못함.

〈표 1〉 건설업체의 현금흐름

(단위 :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영업활동현금흐름(A)	14.4	14.6	17.1	5.2
당기순이익	14.0	18.6	17.4	23.5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가산)	14.9	16.2	19.3	14.5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차감)	7.9	9.1	10.5	14.8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변동	-6.6	-11.1	-9.1	-18.0
투자활동현금흐름(B)	-15.3	-12.2	-22.3	-22.3
현금유입	45.4	63.8	75.8	65.6
현금유출	60.6	76.0	98.1	87.9
재무활동현금흐름(C)	1.8	12.2	8.3	16.1
현금유입	84.8	110.0	112.6	118.4
현금유출	83.0	97.8	104.2	102.4
총 현금흐름_현금 증감액(A+B+C)	1.0	14.7	3.2	-1.1

주 : 1) 1개사당 평균금액임. 2) 2004년은 4,935개사 2005년은 4,338개사 2006년은 4,591개사 2007년은 5,388개사임.

3) 영업활동현금흐름 = 당기순이익 +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 +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변동

4) 투자활동현금흐름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대여금 회수, 유가증권·토지·건물 처분 등)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현금 대여, 유가증권·토지·건물 취득 등)

5) 재무활동현금흐름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장·단기 차입금의 증가, 주식 발행 등)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장·단기 차입금의 감소, 유상감자 등)

-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감소하게 된 주요 원인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마이너스 자산 부채의 변동액이 전년 대비 97.6%나 증가했기 때문임.
 - 그 외 2007년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은 비교 연도 중 가장 낮은 14.5억원이며,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은 비교 연도 중 가장 높은 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41.6% 증가함.
-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변동의 세부 항목을 분석한 결과 매출채권, 선급금, 재고 자산 증가로 인한 마이너스 현금흐름이 크게 증가함.
 - 매출채권의 경우 전년 대비 95.2% 증가한 9.7억원으로 현금의 수익 없이 외상으로 판매한 물량이 전년보다 두 배 정도 증가했음을 의미함.
 - 선급금은 8.2억원으로 전년 대비 45.2% 증가하여 현금흐름을 악화시킴.
 - 재고자산은 전년보다 두 배(91.6%) 증가한 3.6억원을 기록함.

〈표 2〉 건설업체의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변동의 세부항목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영업활동 관련 자산 부채의 변동		-6.6	-11.1	-9.1	-18.0
매출채권의 감소	증가시 (-)	-5.4	-7.7	-5.0	-9.7
선급금의 감소		-1.7	-6.3	-5.6	-8.2
선급공사비의 감소		-0.4	-0.7	-0.8	-0.6
미수금의 감소		-2.1	-2.3	-3.1	-4.1
재고자산의 감소		-1.6	-2.2	-1.9	-3.6
매입채무의 증가	감소시 (-)	4.8	3.7	6.2	5.5
공사선수금의 증가		3.7	4.5	4.5	9.5
분양선수금의 증가		-0.7	-0.3	-0.2	-0.8
예수금의 증가		0.1	0.4	1.0	-0.4
단기임대보증금 증가		0.2	0.3	-0.4	-0.3
장기임대보증금의 증가		1.3	0.7	0.1	0.7
기타자산 부채의 변동		-4.8	-1.0	-4.0	-6.2

- 결과적으로 2007년 미분양 아파트와 같은 현금 유입이 없는 판매 물량과 공사 물량이 증가해 현금흐름이 악화되었으며, 2008년 상반기 자재난으로 인한 공사 비용 증가는 건설회사 내 현금흐름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됨.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2009년 업계는 수주량을 축소시키고 재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박철한(연구원:igata99@cerik.re.kr)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다시 고려해야”

- ‘사업예비비’와 ‘사업책임자제도’ 등 전제조건 완비 후 중기적 관점에서의 시행이 바람직 -

■ 최저가낙찰제 건설 현장의 주요 문제점

- 최근 최저가 공공건설 현장의 실태조사 결과, 대외 환경 악화로 자금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발주자의 설계변경 및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승인 거부 내지 처리 기간 지연으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경색 문제를 겪고 있었음.
 - 불가피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나 그 귀책 사유를 시공사로 돌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설계변경의 처리 기간도 신청을 한 후 통상 8~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남.
 - 최근 예상치 못했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발주자들의 에스컬레이션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유동성의 문제는 하도급자의 기성 중 유보금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해 생산 체계 하부로 전가돼 중소기업체들의 부도 내지 중도 타절이 속출하고 있으며 현장의 안전과 품질에도 타격을 주고 있었음.

■ 100억원 이상으로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계획

- 정부의 예산 10% 절감 방안 중 하나로써, 정부는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예산 10% 절감 방안은 턴키 낙찰 방식의 개선(1조원), 실적공사비 전환 확대(1조 1,600억원), 품셈 정비(6,600억원), 설계의 경제성(VE) 확대(1조 3,800억원), 최저가낙찰제 확대 도입(3,900억원) 등¹⁾이며, 이 총액은 2007년 공공공사 발주액(46조 6,79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임.

■ 파행적인 최저가낙찰제 건설 현장 운영

- 현재 건설업체는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 적용으로 인해 최저가낙찰제 적용 직전

1)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보도자료(공공건설사업 합리화로 예산 10% 절감 추진, 2008.4.30)

시점보다 20% 이상 낮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가낙찰제 건설 현장의 실행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최저가낙찰제 건설 현장의 실행률은 약 110% 전후로 발표됨.
- 이런 공공건설 현장의 적자 운영 상황에서, ‘예산 10% 절감 방안’의 강력 시행으로 인해 공공건설 현장의 불가피한 설계변경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로 인해 선투자의 여력이 없는 원도급자나 하도급자는 설계변경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사 중단’이라는 파행적인 현장 운영이 불가피함.

■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 및 저가심의 강화

- 극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국내 건설산업을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시키면서 위기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최상책임.
- 즉, 재정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공공 부문에서 ‘현장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
- 민간 부문의 수주가 거의 없는 현 시점에서 공공 부문의 발주 물량이 확대되면, 이를 수주하기 위해서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에는 ‘저가 투찰’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이런 상황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의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연 7.3%씩 확대된 공공 부문 물량은 ‘현장의 유동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결국 국내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이 더 지속될 위험성이 높음.
- 따라서, 국내 건설산업의 연착륙 시점까지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유보할 것을 제안하며,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사업예비비’와 ‘사업책임자제도’ 등의 전제 조건이 완비된 후 중기적인 관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이미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는 공사에는 저가심의제도를 강화²⁾해, 공공 부문 현장에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영환(연구위원-yhlee@cerik.re.kr)

2) 일부 공공 발주기관(SH공사와 도로공사)이 적정성 심사기준을 강화해 저가 투찰을 방지하려는 사례를 보여주는 최근 보도가 있었음.(건설경제, 2008.10.23)

자산 가격 버블의 발생과 측정

■ 버블의 발생

- 자산 가격의 버블에 대한 엄밀한 이론적 정의는 없으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미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대중적 기대가 확산되면서 가격 인상이 촉발되는 현상
 - 추세 변화를 이탈한 자산 가격 상승
 - 내재 가치를 초과한 자산 가격 등
- 자산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합리적일 경우, 이론적으로는 시장 가격과 내재 가격의 갭은 지속될 수 없고, 버블은 자연 소멸하게 됨.
 - 이처럼 경제 주체의 합리적 행동과 가격 메커니즘에 의한 합리적 가격 결정을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은 버블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함.
- 그러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을 전제하더라도 당분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버블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시장 참가자 사이에 확산되면서 자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고, 그 결과 시장가격이 상승하는 자기 실현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이 반복되면서 버블이 커질 수 있음.
 - 초기의 가격 상승은 내재적 가치 변화에 의한 것이지만, 비탄력적인 택지 공급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가격을 장기 균형 수준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버블이 발생
 - 뉴튼은 “나는 천체의 운동은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고 함.
- 부동산시장에서는 상품이 이질적이며, 거래 비용이 크고, 상품에 대한 시장 정보가 불완전하며,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신속한 가격 조정이 어려워 다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버블이 확대되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

■ 버블의 측정

- 버블의 개념은 직관적으로는 간단하나 실제로 그 존재 여부를 측정하기는 매우 어려움.
 -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이것이 버블 때문인지 아니면 내재적 가치 증가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내재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수십 년 이후의 미래의 예상 수익과 할인율 등을 알아야 하지만, 이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자산 가격에 버블이 존재하는지 여부 또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음.
 - 미국 FRB 의장인 Bernanke는 FRB가 버블을 식별할 능력이 없다고 실토하기도 함.
 - Flood·Hodrick 등은 계량경제학적 분석으로는 버블의 존재를 판단하지 못한다고 주장
 - Sachs 등은 1990년대 이전 일본의 토지 가격이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은 버블로 설명할 수 없고, 시장 수급 요인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
-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버블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거나 그 크기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개발되었으나, 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버블이 발생하면 가격 변동폭이 커진다는 사실에 착안한 분산 분석 방법이 있는데, 회귀식을 통하여 내재 가격을 추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식별에는 한계가 있고, 모형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자산 가격의 추세 분석을 통하여 경기의 정점과 저점을 식별하고,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의 자산 가격 상승률의 크기를 기준으로 Boom과 Bust를 정의하는 방법도 있음.
 -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또는 임대료에 대한 매매 가격 비율이 장기 평균치보다 상회 여부를 기준으로 버블을 판정하는 방법도 있음.
- 시장 가격이 내재 가격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돼야 버블이 존재한다고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된 명확한 기준은 없음.
 - 내구 연한이 긴 주택의 경우, 향후 예상되는 모든 수익을 고려한다면 어떠한 가격도 합리화될 수 있고, 버블의 존재 여부는 그 때 가 봐야 알 수 있다는 맹점이 있음.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 주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회의 참석 현황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2.3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분석팀 부동산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여 2009년의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이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
12.4	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 자문회의 참여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를 위한 지수 개발 및 건설 현장 특성에 맞는 조사 방법 검토
12.5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및 2009년 골재수급심의위원회 참여 2009~2013까지의 중장기 및 2009년도 골재 수급 계획에 대한 심의

■ 신규 연구결과물 발간 현황

분류	명칭	주요 내용
연구 보고서	건설업 사회공헌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시사점 도출 향후 건설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발전방안 제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개선방안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년 임금실태조사 연구의 후속 연구 품셈상의 직종의 합리적 조정 및 실제 지불 임금과 조사, 발표되는 임금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한국건설기네스(I) : 도로철도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에서 건설된 그동안의 주요 도로 및 철도 시설물별로 그 특징과 의의 등을 기록, 한국 건설의 우수성 홍보
이슈 포커스	최저가낙찰제 건설 현장의 실태분석과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예산 절감 추진과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공공건설 현장의 운영 애로 요인 실태 분석 조사결과 조사 대상 4개 현장 모두 착수단계부터 적자 운영되고 있으며, 설계 변경 지연, 거부 등으로 건설현장들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 직면한 상황

■ 기타 연구원 활동

• 연구원 제46차 이사회 개최

- 연구원은 12.5(금)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제46차 이사회를 개최
- 2008년 연구원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와 2008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 진행

“긴급 수혈은 건설업부터 시작해야”

휴일 아침 포근한 잠자리의 유혹을 떨쳐내기는 여간해서 쉽지 않다. 쓴 보약을 마시는 심정으로 산행에 나서지만 오르막길 고비마다 ‘여기서 돌아갈까’ 계속 고민하게 된다. 높은 산일수록 정상까지의 길은 멀고 험하다. 그렇지만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세상의 아름다움은 고생을 보상하고 남는다.

높이 오를수록 큰 하산의 즐거움

인생도 등산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표현이 있듯 살다 보면 인생에는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일정한 상식이 적용되는 등산에 비하여 인생이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력한 대로 거둔다’는 큰 틀에서 보면 인생을 등산에 비유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나태함은 마치 산언저리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듯한 삶을 초래하게 된다. 절반의 성공을 거둔 중년의 생활도 능선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작은 성공에 안주하면 더 큰 발전과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생의 후반기를 따져 보아도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고진감래(苦盡甘來)다.

미국발 금융 위기...국내 실물경제에도 악영향

고진감래라는 말이 경제에도 통할까. 미국발 또는 중국발 등의 충격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다. 주식이 폭락하고 환율과 금리는 치솟는다. 금융 부문의 혼돈은 실물경제의 흐름에도 영향을 줘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9월 금융 위기 이후 업체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부도 업체 수가 2005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잘 알려진 중견 건설업체의 부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건설업계의 ‘부도 도미노’의 위기는 언제든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금융 의존도가 높은 건설산업이 무너지면 은행이 부실화되고 연쇄 작용으로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뒤따른다. 정부도 각종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지금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인 형국이다. 정부는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 경제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인내와 自救로 외부 충격 극복해야

그 출발점은 일자리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가 가장 큰 건설산업의 활성화일 것이다. 지역 경제에 밀착된 건설산업이야말로 긴급 수혈의 효과가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희망이 없다면 어찌 고통을 이겨내겠는가. 어려움을 인내하고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국엔 달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꿈을 가져보자. 선조들께서 들려주시던 ‘세상만사 고진감래이니라’를 다시한번 상기해보자. <국민일보, 2008. 11. 26>

김흥수(원장:hskim@cerik.re.kr)

